

서류제출부터 계약까지 디지털화... 농업인·국민 편의 향상

농어촌공, 농지임대수탁사업 전 과정 디지털화로 편의 제고
고령 농업인 위한 디지털 창구 농업경영체 정보변경도 편리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의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국민이 보다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도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농어촌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제출, 계약체결, 경영체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우선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필수서류 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대장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3만여 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이동시간 역시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약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찾아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다. 이제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 디지털 창구(데블릿)를 마련하고 서명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했다. 15일 기준 14만2000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아울러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용이해졌다. 그동안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마친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야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다. 농업경영체 정보란 농업인 등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공익직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등 농업 관련 용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 계약데이터를 연계했다. 이로써 농업인이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공사에서 계약을 마친 뒤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도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의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지임대수탁뿐만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서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농협, 학교급식 납품 김치 안전성 강화

농협김치 가공공장 12개소 대상 '신학기 농협김치 안전성 집중점검'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등 분석



농협이 농협김치 가공공장 12개소 대상으로 '신학기 농협김치 안전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농협중앙회

농협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농협김치의 품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학기 농협김치 안전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국 농협김치 가공공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포기김치와 열무김치 등 대표 품목을 수거해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식품 안전과 직결된 주요 항목을 집중 분석한다.

특히 김치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직접 느끼는 품질에서부터 효모 발생

여부까지를 면밀히 분석해, 농협김치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고춧가루, 멸치액젓 등 원·부재료와 김치 제품에 대해 연 3회 이상 안전성 점검을 실시해 왔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재검증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정룡 농협식품연구소장은 "농협은 선제적인 품질 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협김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日 협력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가스공-JERA, LNG 수급 협약

한국가스공사가 JERA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을 강화한다.

가스공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최대 LNG 수입사인 JERA와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JERA는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각각 50%씩 출자해 2015년 설립한 회사로 일본 최대 LNG 수입 기업이다. 일본 전체 전력 공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양사는 세계 1~2위 수준의 LNG 구매자로,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고

용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LNG 수급 관리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양측은 앞서 2023년 LNG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일본에서 열린 '2025 LNG 생산자-구매자 컨퍼런스(PCC)'를 계기로 LNG 물량 교환(스왑) 사업도 추진해 실제 협력 사례를 만든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JERA와 연내 카고 교환 추진 예정 등 국가 간 공조를 포함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 시장개방 확대 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인도서 통상장관 회담 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델리에서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한국과 인도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양국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약 14억5000만 명)를 보유한 데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세계 주요 성장 시장이다. 한국과 인도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57억달러로 인도는 한국의 8위 수출국이다. 이는 한·인도 CEPA가 발효된 2010년(171억 달러)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다만 최근 인도가 영국·오만·뉴질랜드(2025년)에 이어 올해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과 잇따라 높은 수준의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CEPA 자유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CEPA 개선협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WTO 개혁 방향,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문제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여 본부장은 방인 기간 현지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도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인도 정부 싱크탱크인 니티 아요그(NITI Aayog)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건설·별목업, 이달까지 고용·산재보험 신고”

근로복지공, 법정 신고기한 내 토탈 서비스 이용 시 보험료 경감

용하면 보수총액과 예상 보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 대상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실제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이며, 개산보험료는 올해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휴대전화로 보험료 신고서를 촬영해 문자로 전송하는 MO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을 통해 사진 제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특히 법정 신고기한 내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한용수 기자